

‘엄히고설킨 실타래...’ 광주 군공항 이전, 해법 찾을까

‘시·도·군’ 군공항 이전 3자 대화 광주시 수용
 군공항 이전 반대 무안군 대화 참여 여부 관심
 강기정 광주시장 마라톤 비유 “인내심 가져야”

광주시에 ‘전남도·무안군과 즉각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도 간 최대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전남도가 제안한 ‘광주시·전남도·무안군 간 군공항 이전 3자 대화’를 즉각 수용했다.

광주시에 지난 15일 ‘광주시·전남도·무안군·함평군’ 간 4자 대화를 제안하자, 전남도가 함평군을 제외한 ‘광주시·전남도·무안군’ 간 3자 대화를 역제안했으며, 광주시가 이를 다시 수용한 것이다.

무안과 함평은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이다.

광주시에 군공항 이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양자 간·3자 간·다자 간 대화 등 어떤 형식의 대화 테이블에도 즉각 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전남도가 책임지고 이달 내 3자 간 대화를 위한 논의의 테이블을 마련해 달라는 뜻도 밝혔다.

광주시에 이 같은 의사표시에 전남도는 이날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남도가 앞서와 같은 광주시의 입장을 모두 수용한다고 해도 또다른 대화 주체인 무안군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무안군은 무안공항으로의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자 간 대화의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우선 대화와 타협으로 무안군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전남도는 전남 무안군의 참여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만큼, 광주시도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인다면 무안군과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이라며 공항 이전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광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무안군 설득을 위한 노력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광주시는 무안군민을 설득하기 위해 함평에서 진행했던 것과 동일한 주민설명회·공청회·광고 등을 추진할 준비도 돼 있다며 이 같은 행사를 무안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책임지고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답했다.

지난 10여 년 간 지지부진하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올해 국가 지원을 핵심 골자로 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이 제정·공포되면서 급

물살을 땀다. 특히 광주와 인접한 함평군이 군공항 유치의사를 밝히면서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도지사도 손을 맞잡고 상생을 약속하는 등 군공항 이전 문제가 속도를 내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전 방식과 이전 지역에 대한 서로 다른 셈법이 엄히고설키면서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전 대상지 선정 절차에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함평군 또한 최초의 태도와 달리 다소 소극적으로 변화하는 모양새다.

답보 상태 속 최근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각의 입장을 통해 제안과 요청을 주고받았으며, 전남 광주시가 ‘즉각 대화에 나서겠다’며

전남도의 입장을 전격 수용했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군공항 이전사업을 마라톤으로 비유하면서 “해묵은 과제를 1년 만에 후딱 해치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며 긴 호흡으로 군공항 이전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희면기자



‘추위 끝, 유채꽃 피어난 서귀포’

추위가 물러나고 예년 기온을 회복한 19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휴애리 농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때 이른 유채꽃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출판기념회의 ‘불편한 진실’... “얼굴 알리기 vs 정치자금 창구”

바야흐로 ‘출판기념회 시즌’이다. 붓물 터지듯 초정장이 쇄도하고 있다. 여·야, 현역·신인, 계파 여부와 상관없이 너도나도 붓는다.

19일 광주·전남 지역정가에 따르면 총선표심의 가능자가 될 연말 민심을 노리고 최근 주말과 휴일에 최소 2~3건, 많게는 10건 가까운 입지자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있다.

유력 인사들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하거나 영상 메시지를 보내와 지지세를 과시하는 정치 이벤트로도 활용되고 있다.

입지자들은 자서전을 매개로 출마 이유와 정치적 철학과 포부, 삶의 궤적과 정치여정 등

을 설명하며 지지와 성원을 호소하고 있다. 엄격한 선거법 탓에 ‘얼굴 알리기’에 어려움이 많은 정치 신인들 입장에선 더 없는 홍보수단이다.

민주당 지역위원회 한 관계자는 “2월 말 경선이 곧 본선”이라며 “권리당원 수만 믿고 있다는 낭패를 볼 수도 있어 출판기념회나 북콘서트 등을 통한 컨벤션 효과에 힘을 쏟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출판기념회를 둘러싼 곱잡은 시선은 여전하다. “공공연한 폐단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출판기념회는 누구나 열 수 있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만 제한된다. ‘책

값’과 ‘사용처’에 대한 제한은 없다. 공제도 안 된다. 영수증 발행,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회계 감사까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치 후원금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 때문에 출판기념회를 두고 ‘편법 후원’ ‘정치자금 모금회’ ‘준조세’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씌워졌고, 유력한 출마자의 경우 ‘수 억 원을 모았다’는 뒷말도 심심찮게 들리곤 한다. ‘대필 자서전’ 논란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돈 가름에 시달리는 출마자에게는 ‘가름의 단비’와도 같은 행사지만 현장에선 봉투에 얼마를 넣어야 할 지 고민하는 정당인과 기업인,

“인지도 높이고 정치적 포부 펼치고 지지층 점검에도 큰 도움”
 “편법 후원, 정치자금 모금회, 준조세 구태”...비판 여론 적잖아

공직자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출판기념회 자체령’을 내렸고, 이병훈(동남)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출판기념회로 (현직 의원이) 지역민들을 불편하게 해서야 되겠느냐”며 자비를 들어 의정보고회를 준비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출판기념회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가 판매 ▲현금구매 금지 ▲1인당 구매한도 설정 ▲수익금 신고 ▲현역의원 출판기념회 자체 의정보고회 활성화가 필요하고, 2014년 좌초된 ‘정치인 출판기념

회 금지법’에 대한 입법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중앙 정치인들까지 알음알음으로 초청받아 정가의 5~10배로 구입하다 보니 한 달새 책값으로만 수 백 만원을 사용했고, 주변 기업인과 공무원들도 불만소리”라며 “일천적 금지는 어렵더라도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제도적 보완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변용일기자

화·수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
[하서 김인후 선생]의 숨결이 살아 있는

장성 필암서원

청산도 절로 절로
 녹수도 절로 절로
 산도 절로 물도 절로하니
 산수간나도 절로
 아마도 절로 삼긴 인생이라
 절로절로 늙사오리

- 김인후 선생의 '자연가(自然歌)' -

